

주변인(지인·이웃) 신뢰도, 3년 새 최대 25%p 하락!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끈들이 느슨해지고 있다.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변화’ 그 두 번째인 이번 <넘버즈 319호>에서는 각자도생의 시대, 우리가 마주한 신뢰의 위기와 변화하는 공동체 의식을 짚어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곁에 있는 이들에 대한 경계심이다. 친분있는 지인(76%)과 이웃(44%)에 대한 신뢰도가 3년 전보다 각각 19%p, 25%p씩 급락하며 가까운 주변인에 대한 신뢰의 벽이 높아졌다. 갈등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여전히 높은 이념 갈등 속에 수도권-지방 및 남녀 간의 갈등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12년째 90% 안팎의 높은 수준에서 요지부동이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우리 국민은 희망하는 국가 미래상으로 조사 이래 처음 ‘경제적 부유함’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1순위로 꼽았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더 나은 가치를 지향하는 한국인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5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13세~79세의 남녀
표본 규모	총 6,180명 (유효표본)
조사 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TAPI ; 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집계구' 리스트 활용한 층화확률비례추출법을 통해 집계구 선정- 추출된 집계구에서 표본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 선정된 가구에서 생월법을 활용하여 적격자 1인 무작위 추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1.3\%p$
조사 기간	2025년 8월 15일 ~ 2025년 10월 2일
조사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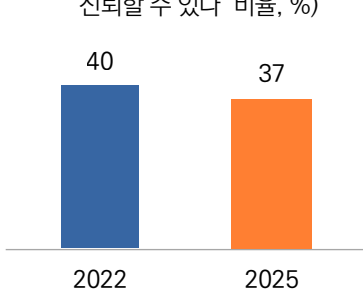
01

[사회적 신뢰와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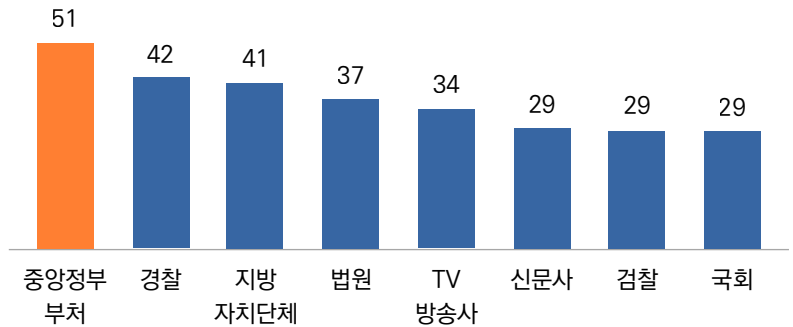
중앙정부 제외한 모든 기관의 신뢰도, 절반에도 못 미쳐!

- 2025년 우리 사회 신뢰도는 37%로, 3년 전(40%)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부처'(51%)만 유일하게 과반의 신뢰를 얻었을 뿐, 경찰(42%), 법원(37%) 등을 포함한 대다수 기관은 절반에 못 미치는 신뢰도에 머물렀다.
- 특히 국회(29%), 검찰(29%), 신문사(29%) 등 입법·사법·언론을 대표하는 주요 기관들은 모두 20%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일반국민, '신뢰할 수 있다' 비율, %)



[그림] 기관별 신뢰도** (2025, 일반국민, '신뢰할 수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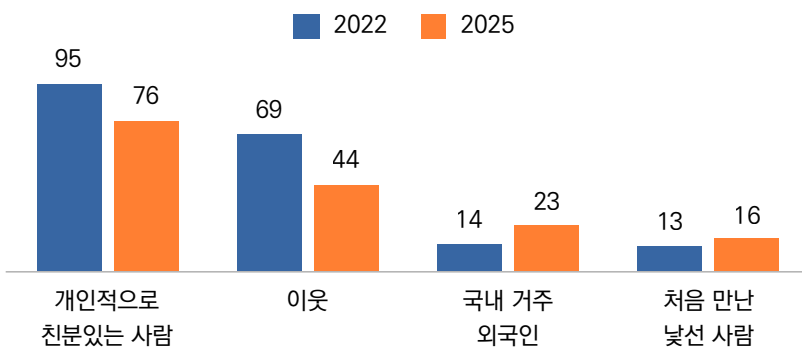
*10점 척도(1~4점: 신뢰할 수 없다, 5~6점: 보통, 7~10점: 신뢰할 수 있다)

**4점 척도(약간+매우 신뢰한다, 별로+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주변인(지인·이웃) 신뢰도, 3년 새 최대 25%p 하락!

- 집단별 신뢰도를 보면 국민들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친분있는 지인(76%)과 이웃(44%)에 대한 신뢰는 2022년 대비 각각 19%p, 25%p씩 크게 낮아졌다.
- 반면, 국내 거주 외국인(14%→23%)이나 낯선 사람(13%→16%)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익숙한 주변인에 대한 실망과 경계는 커진 반면, 불특정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집단별 신뢰도* (일반국민, '신뢰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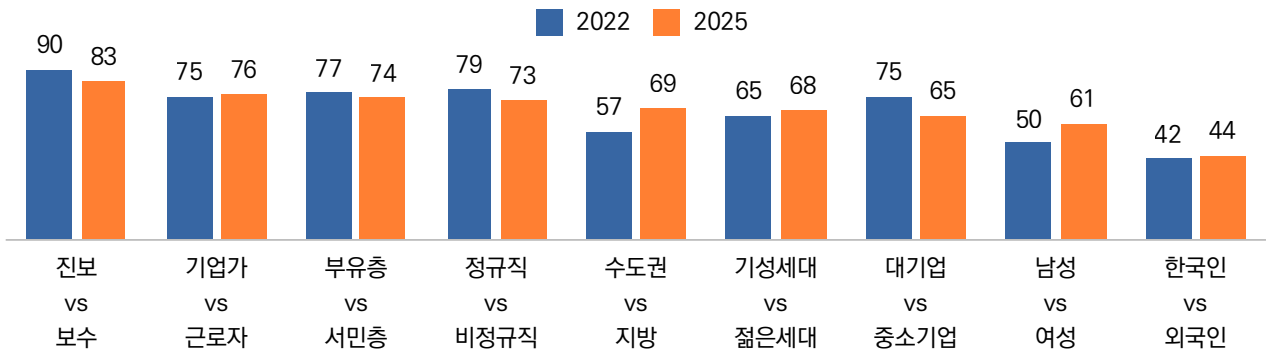


*4점 척도

‘진보-보수 갈등’ 가장 심각, ‘수도권-지방 갈등’은 급격한 상승세

-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국민의 83%가 ‘진보와 보수(이념)’ 갈등을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기업가와 근로자(노사)’ 76%, ‘부유층과 서민층(빈부)’ 74% 등의 순이었다.
- 주목할 점은 갈등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념 갈등(-7%p)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10%p)은 감소한 반면, 수도권과 지방 갈등(12%p), 남녀 갈등(11%p)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두 자릿수 이상의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다.
- ‘수도권과 지방 갈등’은 인프라 격차의 체감, 자산 가치 양극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남녀 갈등’은 선거 국면에서 젠더 이슈가 정치적으로 정쟁화된 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혐오 표현이 확산되면서 양측 모두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게 된 점 등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그림] 집단 간 갈등의 크기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갈등이 크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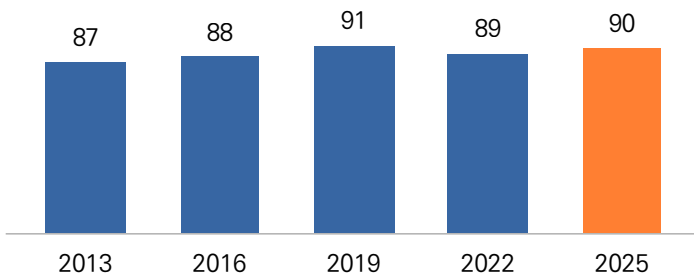


*4점 척도

경제적 양극화 심각성 인식, 12년째 90% 안팎 높은 수준!

-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묻은 결과, 2025년 기준 국민의 90%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3년 87%, 2016년 88%, 2019년 89%를 거쳐, 현재까지 줄곧 9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이는 소득 및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사회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10년이 넘는 기간에도 거의 좁혀지지 않은 채 우리 사회에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인식* (일반국민, ‘심각하다’ 비율,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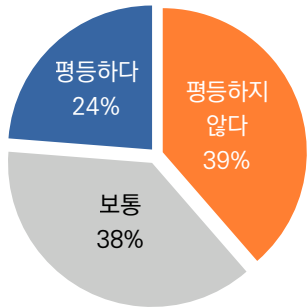
02

[공정성과 사회적 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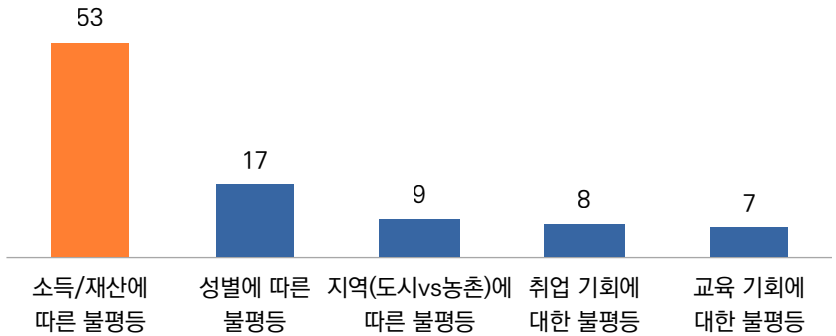
우리 사회 '평등하지 않다' 39% > '평등하다' 24%

- 우리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평등하다'(24%)고 느끼는 비율보다 '평등하지 않다'(39%)는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소득/재산에 따른 불평등'(53%)으로, 성별(17%)이나 지역 격차(9%)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림] 우리 사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 (2025, 일반국민)



[그림]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분야* (2025, 일반국민,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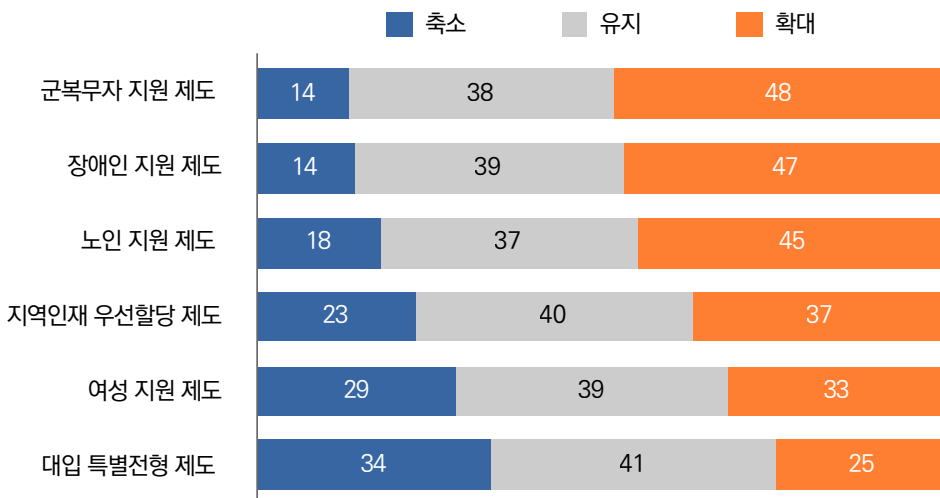


*10점 척도(1~4점: 평등하지 않다, 5~6점: 보통, 7~10점: 평등하다)
 Note) 합이 100이 안 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함.

국민 절반가량, '군 복무·장애인·노인 지원' 확대에 긍정적!

- '군 복무자'(48%), '장애인'(47%), '노인'(45%)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축소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이나 신체적·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보호망 강화에는 우리 사회가 매우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 반면, '대입 특별전형'은 축소 의견(34%)이 확대(25%)보다 높았으며, '여성 지원 제도' 또한 축소 의견이 29%로,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이는 대학 입시나 취업 등 '경쟁'이 치열한 영역에서는 과정의 공정성을 더 우선시하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 소수자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2025,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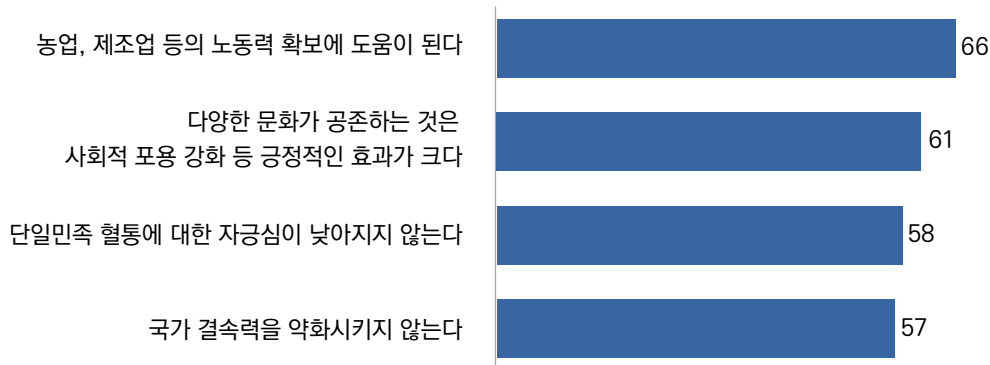


*5점 척도(1점: 크게 축소해야 한다 ~ 5점: 매우 확대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국민 대체로 긍정적!

-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국민의 66%는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사회적 포용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의견도 61%에 달해, 다문화를 우리 사회의 건강한 동력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 또 다문화가 민족적·국가적 자긍심과 결속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비교적 낮았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고’(57%), ‘단일민족 혈통에 대한 자긍심 또한 낮아지지 않는다’(58%)고 응답해, 다문화 수용과 민족적 자긍심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다문화에 대한 의견* (2025, 일반국민,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4점 척도(매우+대체로 그렇다,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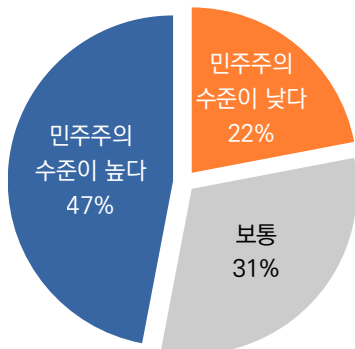
03

[민주주의와 사회 인식]

국민 절반 가까이(47%), ‘한국 민주주의 수준 높다’ 평가

-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국민의 절반 가까이(47%)가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낮다’는 응답은 22%에 그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2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인식* (2025,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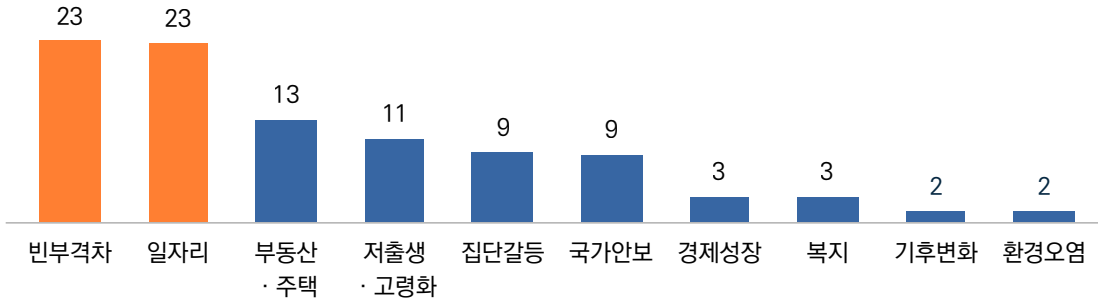


*10점 척도(1~4점: 민주주의 수준이 낮다, 5~6점: 보통이다, 7~10점: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 '빈부격차'와 '일자리' 문제 1위!

-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빈부격차'와 '일자리'가 각각 23%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두 항목의 합계는 46%에 달해, 국민 2명 중 1명 가까이는 경제적 양극화와 고용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부동산·주택' 13%, '저출생·고령화' 11%가 뒤를 이었다.

[그림]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2025, 일반국민, 상위 10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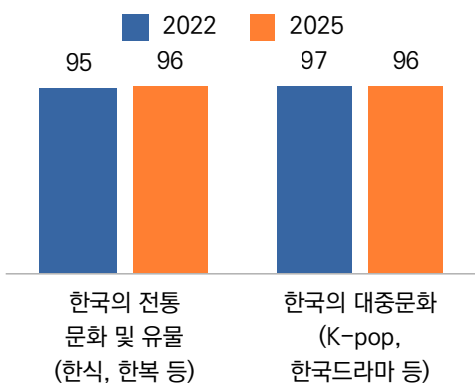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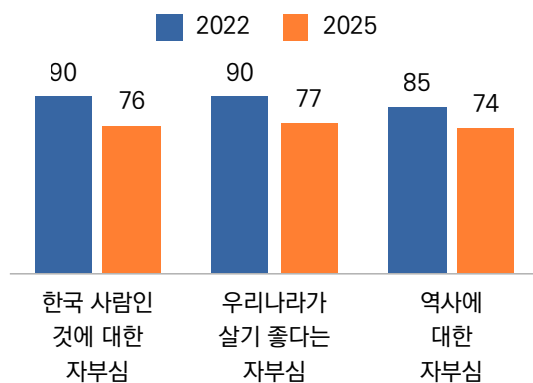
[국가적 자부심과 정체성] 한국인/한국 자부심, 3년 사이 하락세!

- 한국의 전통 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은 2025년 각각 96%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 그러나 한국인의 정체성 인식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76%)과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77%)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2년 대비 10%p 이상 크게 낮아졌다.
- 이는 문화 강국의 위상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이나 국가적 소속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간극을 보여준다.

[그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일반국민, '매우+대체로 우수하다' 비율, %)



[그림] 한국인의 정체성 인식*
(일반국민,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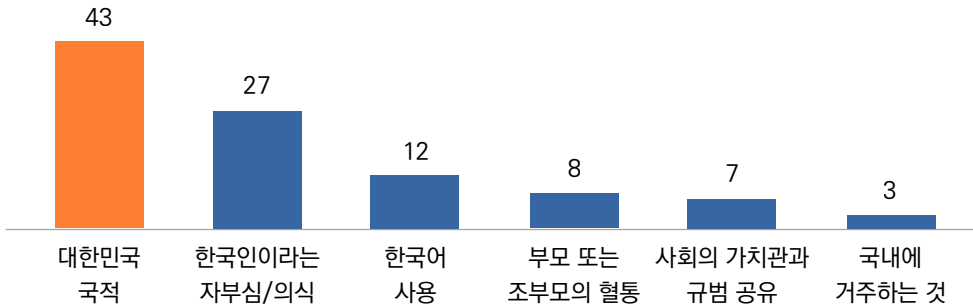


*4점 척도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 ‘대한민국 국적’(43%)이 가장 중요

-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은 결과, ‘대한민국 국적’(43%)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이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의식’(27%), ‘한국어 사용’(12%), ‘부모 또는 조부모의 혈통’(8%)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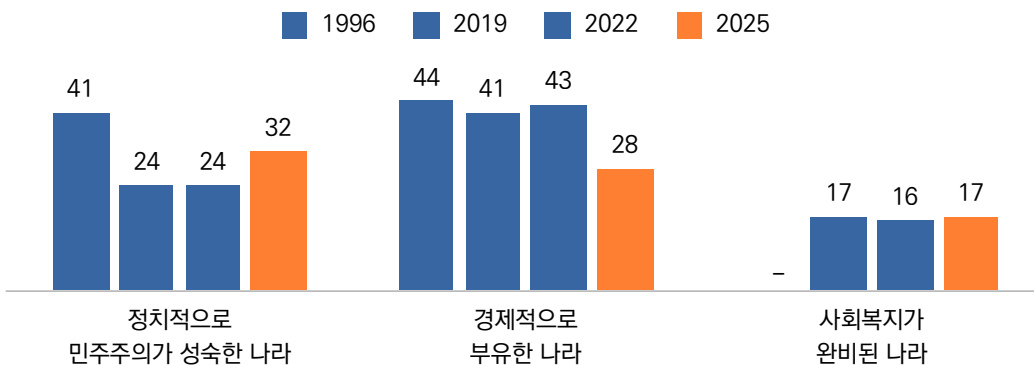
[그림]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2025, 일반국민, %)



희망하는 한국의 미래상, 경제적 부국에서 민주주의 성숙한 나라로 인식 변화

-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으로 우리 국민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3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를 앞지른 결과로, 1996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국가 가치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다.
- 2024년 말 비상계엄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모습 (일반국민, 상위 3개, %)



이번호 요약

1. 주변인(지인·이웃) 신뢰도, 3년 새 최대 25%p 하락!

- 우리 사회 집단별 신뢰도를 보면 친분있는 지인(76%)과 이웃(44%)에 대한 신뢰는 2022년 대비 각각 19%p, 25%p씩 크게 낮아져, 가까운 관계일수록 신뢰 악화 현상을 보였다..

2. '진보-보수 갈등' 가장 심각, '수도권-지방 갈등'은 급격한 상승세!

- 국민의 83%가 진보와 보수(이념)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했으며, 2022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수도권과 지방 갈등(12%p), 남녀 갈등(11%p)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다.

3. 희망하는 한국의 미래상, 경제적 부국에서 민주주의 성숙한 나라로 인식 변화

-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으로 우리 국민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32%)를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를 앞지른 것은 조사 시작 이래 처음이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나 홀로 불링 (페이퍼로드, 로버트D. 퍼트넘 저자/정승현 번역)

관련 성경 구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서 4장 25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 번진 '관계의 단절'과 '고립'의 위기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주변인(지인·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한 현실은 현대인들이 타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느끼며 심리적 요새 안으로 숨어버렸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신의 시대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따뜻한 신뢰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신뢰를 요구하기보다 먼저 '안전한 이웃'이 되는 복음의 실천이 필요하다.

현대인들은 타인을 판단하고 정의(Define)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자비를 베푸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10:37). 이제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신뢰 받기를 기다리기보다, 상처받고 불신에 지친 이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가는 '안전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성도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친절을 통해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신뢰를 쌓아갈 때, 그것이 곧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다.

둘째, 교회는 외롭고 고립된 현대인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적 안전 기지'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거짓과 위선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진실한 소통에 갈급해 한다. 우리 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한국교회 내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활발하지는 못하다. 사람들이 느슨한 인간관계를 선호함으로 깊은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교회 생활 하면서 외롭다고 응답한 기독교인들이 36%나 되고 있다. 이런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어나갈 염려 없이 마음껏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장을 교회가 제공해 준다면 이 사회적 외로움이 강하게 형성된 한국사회에 또다른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새해에는 한국교회 내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전국 곳곳의 교회에서 일어나길 소망한다.